

KERI Brief

복지국가의 법인세 정책과 시사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선진 복지국가들은 그들의 사회·경제 여건에 맞는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성공과 실패를 거치면서 복지재정의 수준과 부담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는 큰 반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남유럽국가들처럼 복지확대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일본처럼 재원조달에 실패할 경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나누고 복지지출의 추이, 세입구조 변화, 세목별 세율변화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을 기점으로 복지재정 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영미형 복지국가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 내외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북유럽과 서유럽형 복지국가들은 20%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영미형과 북유럽형 국가들은 사회보장기여금보다는 일반조세에 대한 의존성이 큰 반면,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유형의 국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

은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법인세율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 북유럽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우리나라 24.2%에 비해 2.2%p 낮은 상황이다. 2005년 이후 영국은 10%p, 캐나다는 7.5%p, 독일은 8.7%p, 이탈리아는 9.4%p, 스페인은 10%p 인하하였으며, 일본도 9.6%p 인하하였다. 최근 미국이 15%까지 법인세율 낮추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자본유치-국내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법인세 인하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복지지출의 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재원조달 방법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대신 법인세를 인하는 것이다.

I. 검토배경

□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의 중심에 복지재정의 규모 설정과 자원조달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지출수준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 복지지출의 증가속도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복지 지출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 반면 지출수준이 낮다는 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자원조달 방법과 우선순위에 효율과 형평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좌·우 진영의 이념논쟁의 중심에 서있음

-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국제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과세보다는 소비세의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형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여 누진도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음

□ 선진 복지국가의 실패와 성공 사례는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인구구조변화만을 고려해도 2040년이 되면 우리는 선진국의 복지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성장을 통한 자연세수만으로 늘어나는 복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실패한 역사적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음

-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확대 압력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사례로, 일본은 자원조달에 실패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일본과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우리도 향후 복지지출 수준과 자원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공약은 넘쳐나고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음

- 선진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우리보다 개인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높지만 법인세 부담 비중은 낮다는 점임

-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간 조세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부담을 강화하자는 정치적 구호가 난무할 뿐, 효율적인 자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유형별 특성, 세수입 구조, 세목별 세율 등을 살펴본 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법인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이영(2014)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27.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의 북유럽 국가의 복지 지출 수준에 도달함

II.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1.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

□ Castles(2004)은 복지국가 유형을 영미형, 북유럽형, 서유럽형, 남유럽형 등 4개로 분류하고 있음²⁾

- 영미형에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되며, 북유럽형에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포함됨
- 서유럽형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포함되고, 남유럽형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 포함됨

(가) 영미형 복지국가

□ 영미형 복지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보다는 민간과 시장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음

-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택적 복지가 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음³⁾
- 영미식 복지유형은 케인즈언식 국가개입주의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소득양극화, 빈곤문제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소득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변화(저출산·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지출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복지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에서 '저복지-저부담' 유형으로 분류됨

- <표 1>에서 보듯이, 영미형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은 GDP의 18.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도 각각 29.2%와 25.7%로 낮음

(나) 북유럽형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복지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복지급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

- 북유럽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규모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통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보편적 복지의 장점으로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음
-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 확대로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복지병'이 만연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하겠다는 영국도 과도한 사회복지지출로 재정악화와 경기침체라는 '영국병'으로 1976년에 외환위기와 IMF 체제를 경험하였음

- 2) 남유럽형을 제외하면 Castles(2014)의 분류는 탈상품화 지수(decommodification score)를 적용한 Esping - Andersen (1990)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코스라티스)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과 유사함. 탈상품화 지수란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 3) 실제 보편적 복지가 형평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음. 조경엽·유진성(2012)은 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의 수혜금액은 소득상위 30%가 소득하위 30%보다 1.35배 ~ 1.68배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스웨덴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음⁴⁾
- 영국은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 복지정책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스웨덴도 복지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 복지지출을 대폭 줄이는 개혁과 함께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음⁵⁾
- 북유럽은 복지수준과 국민세부담이 높은 '고복지-고부담'을 추구하지만, 사회보장 기여금보다는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표 1>에서 보듯이 사회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각각 27.5%와 43%를 기록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은 8.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 서유럽형 복지국가

- 서유럽 복지유형은 자기 책임적인 사회보험을 중시하고, 국가와 민간은 영미형과 북유럽 국가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복지대상자를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 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의 소득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됨
- 국가는 이들이 직무경력을 쌓아가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음
- 서유럽의 복지수준은 '중복지-중부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지지출은 북유럽형에 비해 낮지 않아 '고복지-중부담' 형으로 분류됨

- <표 1>에서 보듯이, 북유럽의 사회지출 비중은 27.2%로 북유럽의 지출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면, 일반조세에 의존하는 북유럽과 달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독일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수차례 증세가 단행되었고, 사회복지와 강력한 노동규제가 동독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장기침체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음
- 슈레더 총리는 '일자리 창출 연대'에 이어 'Agenda 2010'의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세계개혁,⁶⁾ 경제활성화를 추진
- 2003년~2004년까지 하르츠 I ~ III법을 통해 정부의 고용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1인 자영업 창업을 촉진하였음
- 2005년에는 하르츠 IV법을 제정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기간을 단축하고, 실업수당 지급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복지 지출을 큰 폭으로 축소
-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지급연령을 연장(65세 → 67세)하고 보험료를 인상(19.5% → 22.5%)하였으며, 의료보험의 환자부담분 증액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추진
- 2005년에 법인세율을 25%(지방세 포함 37%)에서 19%(지방세 포함 32%)로 인하하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하여 보전

4)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950년에 9.7%에서 1975년에 23.7%, 1993년에 36.8%로 급증하였음

5) 스웨덴은 차등이용료체제(sliding fee)를 도입하여 요금이나 가격을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하고 혜택에 차등을 두는 제도임

6) 2004년 들어 소득세의 최저세율 16%를 15%로 인하고, 최고세율 45%를 42%로 인하

(라) 남유럽형 복지국가

▣ 남유럽 국가의 복지체제는 무분별한 복지확대와 재원조달 실패 사례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남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수급권이 법률로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최저 수준에 대한 개념도 결여 되어 있음⁷⁾

○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수준을 줄이지 못하고 아직도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

- 남유럽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가운데 무분별한 복지확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악화되었으나, 독일, 스웨덴, 영국 등과 달리 경제개혁과 재정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재정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7)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제7장 '복지국가' 참조

〈표 1〉 복지국가 유형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2015년)

(단위: GDP 대비 %)

	사회지출 (a)	국민부담률 (b)	조세부담률 (c)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b-c)	국민부담률의 사회지출 기여도(a/b)
영미형	18.9	29.2	25.7	3.5	64.7
영국	21.5	32.5	26.5	6.0	66.2
미국	19.0	26.4	20.1	6.3	72.0
북유럽형	27.5	43.0	34.8	8.2	64.0
핀란드	30.6	44.0	31.3	12.7	69.5
스웨덴	26.7	43.3	33.6	9.7	61.7
서유럽형	27.2	41.7	26.9	14.8	65.2
독일	25.0	36.9	22.9	14.0	67.8
남유럽형	26.2	37.1	26.1	11.0	70.6
이탈리아	28.9	43.3	30.0	13.3	66.7
일본	23.1	32.0	19.3	12.7	72.2
OECD 평균	21.0	34.3	25.1	9.2	61.2
한국	10.1	25.3	18.5	6.7	39.9

주: 1. 복지 유형별 평균값이며, 유형별 대표 국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음

2. 일본은 2014년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마) 일본

□ 일본은 앞서 언급한 4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적 전통과 인구구조변화 및 경제성장의 패턴이 우리와 매우 유사하여 일본의 복지 발달 단계로부터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은 개인보다는 가족과 사회공동체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과 기업이 담당해 왔음

- 그러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현격히 저하되어 왔고, 동시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늘면서 자녀부양기능마저 약화되어 왔음

○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본은 정부가 노인복지와 보육정책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있음

- 일본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980년에 10.2%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침체로 복지비용이 1990년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23.1%에 달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양극화, 빈곤 등의 사회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인기영합적인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리의 현 상황과 매우 유사함

- 민주당 집권시절 도입되었던 아동수당,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자원조달에 실패하면서 대부분 폐지되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⁸⁾

2.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 추이

□ 남유럽형 복지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복지국가에서 1990년까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추세를 유지

하다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1>에서 보듯이, 북유럽국가의 사회지출은 1980년에 GDP 대비 19.8%에서 1991년에 28.4%까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27% 내외에서 안정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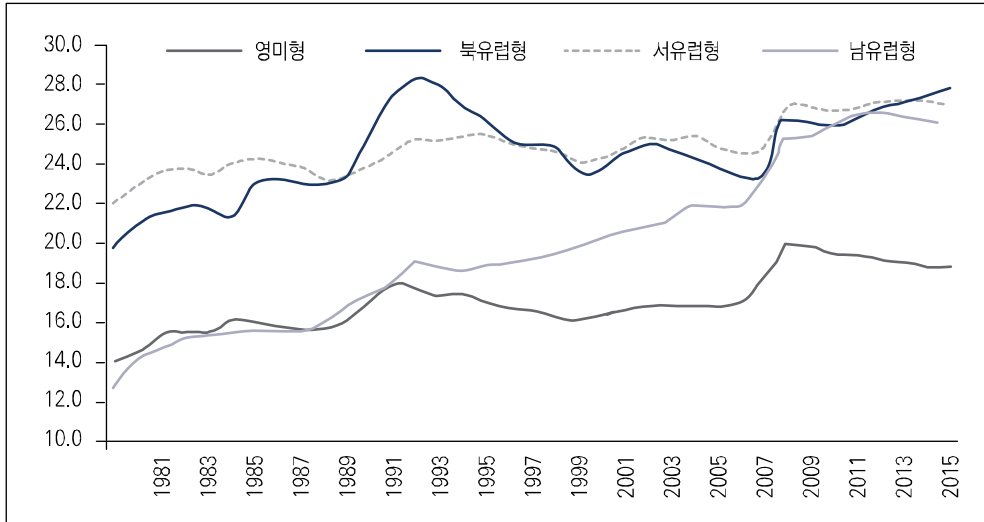
○ 서유럽형 국가도 1990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북유럽 국가의 지출수준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영미형 국가들의 복지지출도 1990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1990년대에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아직 20%를 넘지 않고 있음

8) 조경엽·허원제(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시사점」 참조

〈그림 1〉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 비중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SOG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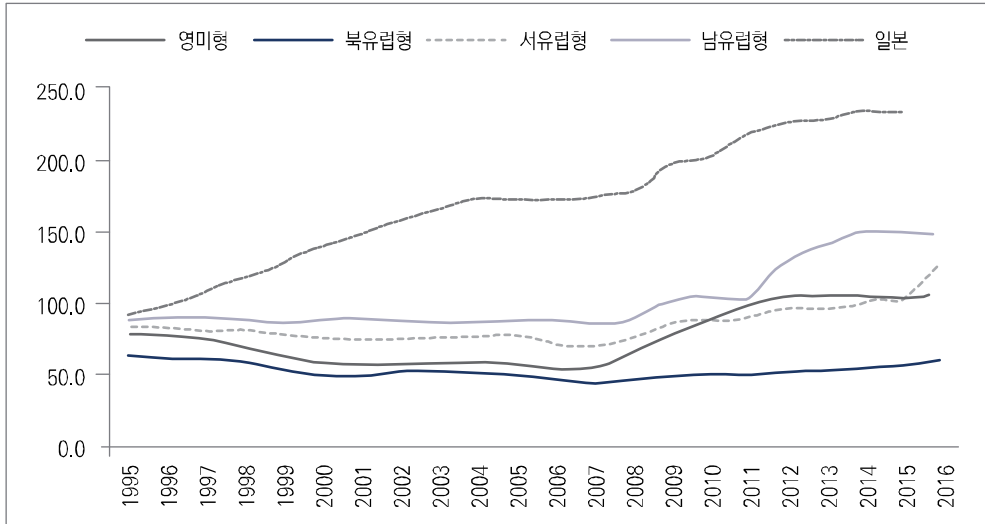
▣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남유럽형 복지국가들은 사회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남유럽 국가의 사회지출은 1980년에 GDP의 1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초에 영미형 수준을 추월했으며, 현재는 26.2%로 서유럽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 남유럽형 복지국가는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사례로 꼽히고 있음
 -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채무가 적정수준을 넘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을 둔화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며, 이는 다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됨

- 조경엽 외(2010)에 따르면, 높은 국가채무 비율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겪지 않는 나라들은 튼튼한 세입기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국민저축 중 적어도 하나는 견실하게 유지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0% 내외를 기록했고, 제조업 비중이 30% 내외에 그치고 있어 세입기반이 극히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저축율도 10% 내외로 OECD 평균 23%에 비해 극히 낮은 상황이었음
- 자국 내에 축적된 재원이 없다보니 필요 재원은 외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남유럽 국가의 외채비율이 60~75%에 달할 정도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취약해졌음
- 국가채무 구성이 취약한 가운데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었고, 현재도 위기는 지속되고 있음

〈그림 2〉 복지국가 유형별 국가채무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tatistics

□ 일본은 복지재원 조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자원조달 실패로 야기된 세계최고의 국가채무는 장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림 3〉에서 보듯이, 일본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지출이 GDP의 10%대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실정⁹⁾

○ 일본은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 복지에 투입할 여력이 약화되고 다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재정수입의 45% 가량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총지출의 20% 이상을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으로 사용하고 있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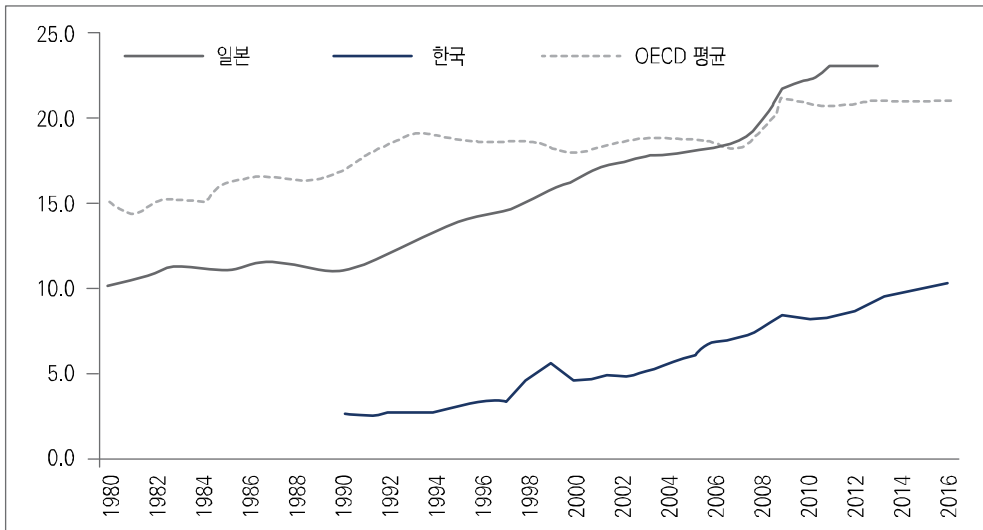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약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정책도 일본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9) 저출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2001년 고령사회 대책대강 등에 따라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추진해 옴. 20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 제고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노후 불안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 조경엽·허원제(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시사점」, 참조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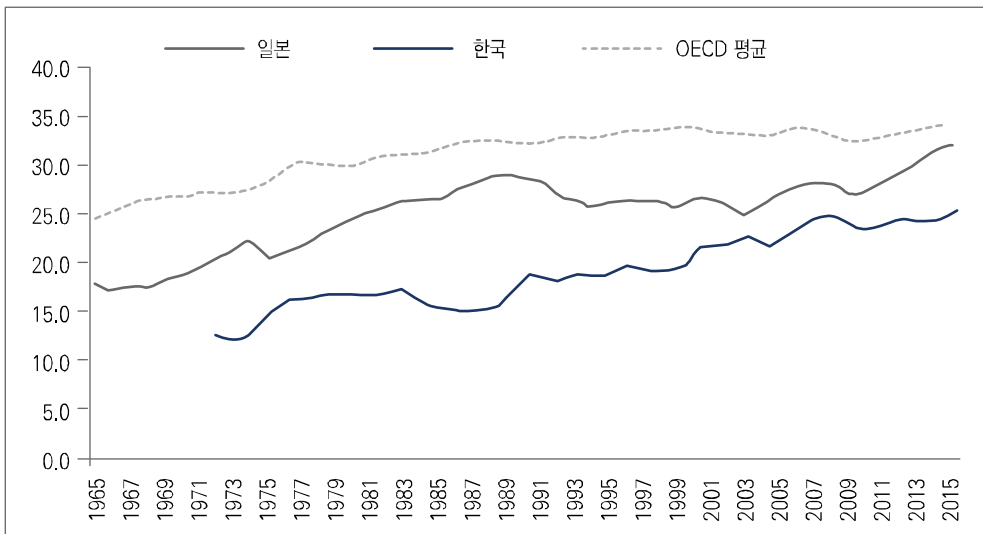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SOGX)

〈그림 4〉 한국과 일본의 국민부담률 비중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Tax Revenue

III. 복지국가 유형별 세수입구조 및 세목별 세율

1. 세입구조

□ 영미형과 북유럽형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일반조세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에의 의존도가 높음

- <표 2>에서 보듯이, 영미형과 북유럽은 조세부담률이 각각 25.7%와 34.8%로 사회보장기여금 12.4%와 1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서유럽과 남유럽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35.7%와 29.8%로 조세부담률 26.9%와 26.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조세수입 구조(2015)

(단위: 총세수입 대비 %)

		영미형	북유럽형	서유럽형	남유럽형	일본 ¹⁾	한국	OECD 평균 ²⁾
총 세수입 대비 비중	소득세	48.1	43.2	29.8	28.7	31.8	30.3	34.0
	개인소득세	36.1	35.2	23.7	21.3	18.9	17.4	24.3
	법인세	11.2	7.4	5.9	6.6	12.9	12.8	8.9
	사회보장기여금	12.4	19.7	35.7	29.8	39.7	26.6	26.1
	종업원	4.9	5.6	13.5	8.5	17.3	11.3	9.5
	고용주	6.9	13.0	18.4	17.8	18.1	12.2	14.7
	자영업자	0.5	1.1	3.9	3.3	4.3	3.2	2.5
	급여세	1.3	2.8	2.1	0.0	0.0	0.3	1.1
	재산세	9.6	3.2	5.0	5.7	8.5	12.4	5.6
	부동산 보유세 ³⁾	7.2	1.9	2.6	2.7	6.4	3.2	3.2
	상속·증여세	0.3	0.3	0.8	0.3	1.2	1.3	0.4
	거래세 ⁴⁾	1.7	0.7	1.3	1.6	0.9	7.9	1.3
	소비세	28.5	30.8	26.4	34.2	19.8	28.0	32.4
일반소비세	17.6	20.9	17.0	19.7	12.2	15.3	20.7	
개별소비세	10.9	9.9	9.3	14.5	7.6	12.7	9.5	
기타⁵⁾	0.2	0.3	1.1	1.7	0.8	2.4	0.8	
GDP 대비	국민부담률	29.2	43.0	41.7	37.1	32.0	25.3	34.3
	조세부담률	25.7	34.8	26.9	26.1	19.3	18.5	25.1

주: 1. 일본은 2014년 기준임

2. 2015년도 데이터정보가 없는 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등은 2014년 데이터 적용

3.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5. 잔차로 추정된 기타 세수입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istics

□ **소득세의 비중은 영미형과 북유럽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법인세의 세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영미형과 북유럽은 개인소득세 비중이 각각 36.1%와 35.2%로 높아 소득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법인세의 비중은 모든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이 12.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영미형이 11.2%, 북유럽이 7.4%, 남유럽이 6.6%, 서유럽이 5.9% 순으로 높음
- 법인세가 인상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법인세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부담하는 세제이고, 대주주가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임¹¹⁾
 -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국내 투자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의 고통이 커지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임

□ **영미형과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제외하고, 소비세는 단일 세목으로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영미형과 북유럽형에서 소비세의 비중이 각각 29.2%와 30.8%로 개인소득세의 비중보다 낮지만,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서는 소비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제를 통해 형평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운영한다는 반증임
-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소득비례적이라는 사실이 소비세를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세수입 확보에 매우 효율적인 세목으로 꼽힌다는 점도 선진 복지국가에서 소비세를 강화하는 이유임

□ **영미형과 북유럽형은 개인소득세-소비세-법인세의 순으로 비중이 높고, 서유럽과 남유럽은 소비세-개인소득세-법인세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모든 유형에서 법인세의 세부담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본유치-투자-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인세의 비중은 높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각각 12.9%와 12.8%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개인소득세는 18.9%와 17.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소비세 비중은 28%로 일본 19.8%보다 높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보장기여금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11) 조경엽(2016), "법인세 오해와 진실" 참조

2. 세목별 최고세율의 국제비교

▣ 다른 유형에 비해 북유럽 국가는 법인세율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반면, 부가가치세율은 가장 높게 유지함으로써 세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 <표 3> ~ <표 5>에서 보듯이, 북유럽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2.0%로 우리나라 24.2%보다 2.2%p 낮고, 부가가치세율은 24.8%로 우리보다 14.4%p 높음
 - 북유럽국가는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5.5%p 인하할 정도로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 복지사민주의 복지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시장은 철저하게 경쟁과 효율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북유럽 정부의 정책의지로 해석됨

▣ 최근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영미형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11%p 인하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2020년까지 현행 19%를 17%까지 인하할 예정임
 -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것은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 구글, 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임
 - 거대한 내수시장과 노동의 유연성 등으로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해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던 미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지난 10년간 캐나다는 7.5%p, 뉴질랜드는 5%p를 인하하는 등 영미형 복지국가들은 법인세율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서유럽형 복지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서유럽형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가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은 1980년에 법인세율이 52%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21.9%p 인하하여 현재는 30.2%를 유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 부담률까지 포함하면 독일 기업의 세부담이 너무 높아 기업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인식하에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도 지난 10년간 6.5%p 인하하여 현재 25%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재정적자가 심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지난 10년간 9.4%p와 10%p 인하하였음

-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을 각각 5%p와 3%p 인상하였음
-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남유럽 국가 전체의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 10년간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도 아베 노믹스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법인세 인하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일 정도로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임¹²⁾**

- 아베정부는 집권당시 39.54%이던 법인세율을 현재 29.97%으로 9.6%p 인하하여 국내 설비투자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법인세율 10%p 인하 시 2030년까지 실질 GDP를 50조 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0% 내외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이유는 비과세감면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원이 넓어 누진도 강화가 바로 소득재분배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과세감면에 따른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¹³⁾
 - 성명재(2016)에 따르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 **또 다른 특징은 부가가치세율을 높게 유지하여 세제의 효율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표 5>에서 보듯이, 북유럽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24.8%에 달하고, 남유럽과 서유럽의 부가가치세율도 20%를 상회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소비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소비세가 단기적으로 소득에 역진적일 수 있지만, 생애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소득 비례적이기 때문에 소비세를 인상해도 소득재분배가 악화되지 않기 때문임¹⁴⁾

□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세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과 소득재분배 악화를 우려한 결과임**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10%의 세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여러 번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인상을 철회하거나 계획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해 왔음
 - 민주당의 2010년 참의원 선거 참패 원인을 소비세 인상에서 찾을 정도로 일본 국민은 소비세 인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아베 정부도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현재 8%로 인상하는데 그치고 있음
- 소비세부담 구조가 소득에 역진적이라는 믿음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치적 수용성이 낮은 상황
 - 그러나 성명재(2016)는 우리나라의 소비세부담 구조가 역진적이기는 하나 역진성이 매우 미약하고 생애 소득측면에서 소득비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12)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중 제3의 화살로 명명되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법인세 인하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꼽히고 있음. 조경엽·허원제(2012) 참조
 13) 누진도와 소득재분배는 역 U자 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하향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 누진도가 강화될수록 소득재분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14) Caspersen and Metcalf(1994), Creedy(1998) 등 참조

〈표 3〉 복지국가 유형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증감률		
							00~17	05~17	10~17
영미형	33.8	29.8	28.2	26.0	26.0	25.9 (-22.5)	-7.9 (-11.3)	-4.0 (-7.4)	-2.3 (-5.7)
· 호주	34.0	30.0	30.0	30.0	30.0	30.0	-4.0	0.0	0.0
· 캐나다	42.4	34.2	29.4	26.7	26.7	26.7	-15.7	-7.5	-2.7
· 아일랜드	24.0	12.5	12.5	12.5	12.5	12.5	-11.5	0.0	0.0
· 뉴질랜드	33.0	33.0	30.0	28.0	28.0	28.0	-5.0	-5.0	-2.0
· 영국	30.0	30.0	28.0	20.0	20.0	19.0	-11.0	-11.0	-9.0
· 미국	39.3	39.3	39.2	39.0	38.9	38.9 (-18.9)	-0.4 (-20.4)	-0.4 (-20.4)	-0.3 (-20.3)
북유럽형	29.3	27.5	26.3	23.1	22.3	22.0	-7.3	-5.5	-4.3
· 덴마크	32.0	28.0	25.0	23.5	22.0	22.0	-10.0	-6.0	-3.0
· 핀란드	29.0	26.0	26.0	20.0	20.0	20.0	-9.0	-6.0	-6.0
· 노르웨이	28.0	28.0	28.0	27.0	25.0	24.0	-4.0	-4.0	-4.0
· 스웨덴	28.0	28.0	26.3	22.0	22.0	22.0	-6.0	-6.0	-4.3
서유럽형	39.8	32.9	29.8	30.4	29.7	29.7	-10.1	-3.1	-0.1
· 오스트리아	34.0	25.0	25.0	25.0	25.0	25.0	-9.0	0.0	0.0
· 벨기에	40.2	34.0	34.0	34.0	34.0	34.0	-6.2	0.0	0.0
· 프랑스	37.8	35.0	34.4	38.0	34.4	34.4	-3.3	-0.5	0.0
· 독일	52.0	38.9	30.2	30.2	30.2	30.2	-21.9	-8.7	0.0
· 네덜란드	35.0	31.5	25.5	25.0	25.0	25.0	-10.0	-6.5	-0.5
남유럽형	37.9	32.9	28.0	28.7	28.7	27.8	-10.0	-5.1	-0.1
· 그리스	40.0	32.0	24.0	26.0	29.0	29.0	-11.0	-3.0	5.0
· 이탈리아	41.3	37.3	31.4	31.3	31.3	27.8	-13.4	-9.4	-3.6
· 포르투갈	35.2	27.5	26.5	29.5	29.5	29.5	-5.7	2.0	3.0
· 스페인	35.0	35.0	30.0	28.0	25.0	25.0	-10.0	-10.0	-5.0
일본	40.9	39.5	39.5	32.1	30.0	30.0	-10.9	-9.6	-9.6
한국	30.8	27.5	24.2	24.2	24.2	24.2	-6.6	-3.3	0.0
OECD 평균	32.5	27.9	25.5	24.9	24.7	24.2	-8.3	-3.7	-1.3

주: 1. 미국과 영미형의 () 안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으로 인하되는 연방정부의 법인세율 15%에 지방세 3.9%를 더한 수치임

자료: OECD Statistics

〈표 4〉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세 최고세율 변화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16	증감률		
						00~16	05~16	10~16
영미형	43.9	42.2	45.2	44.4	45.2	1.3	3.0	0.8
· 호주	43.7	43.7	43.7	50.0	55.0	11.3	11.3	5.0
· 캐나다	45.0	40.0	40.0	40.0	40.0	-5.0	0.0	0.0
· 아일랜드	50.0	49.0	45.0	50.0	50.0	0.0	1.0	0.0
· 뉴질랜드	47.5	43.5	40.0	39.0	38.7	-8.8	-4.8	-0.3
· 영국	46.7	41.4	41.9	46.3	46.3	-0.4	4.9	0.0
· 미국	45.8	42.2	41.4	43.0	43.3	-2.5	1.0	0.3
북유럽형	54.3	52.7	50.2	50.8	50.8	-3.5	-1.9	0.0
· 덴마크	26.0	24.0	21.0	20.0	20.0	-6.0	-4.0	0.0
· 핀란드	58.3	53.5	46.7	54.5	54.5	-3.8	1.0	0.0
· 노르웨이	40.0	40.0	32.0	32.0	32.0	-8.0	-8.0	0.0
· 스웨덴	43.8	42.1	41.7	41.7	41.7	-2.1	-0.4	0.0
서유럽형	55.3	49.4	48.7	51.6	52.5	-2.8	3.1	0.9
· 오스트리아	60.5	53.5	53.7	53.8	53.3	-7.2	-0.2	-0.5
· 벨기에	47.9	46.4	46.4	49.5	53.5	5.7	7.1	4.0
· 프랑스	53.8	44.3	47.5	47.5	47.5	-6.3	3.2	0.0
· 독일	45.0	40.0	45.0	50.0	54.0	9.0	14.0	4.0
· 네덜란드	39.0	39.0	35.5	33.0	33.0	-6.0	-6.0	0.0
남유럽형	44.9	42.3	44.8	50.1	51.1	6.2	8.8	1.0
· 그리스	40.0	38.0	32.0	16.0	15.0	-25.0	-23.0	-1.0
· 이탈리아	50.0	50.0	50.0	55.9	55.9	5.9	5.9	0.0
· 포르투갈	42.0	19.0	19.0	25.0	25.0	-17.0	6.0	0.0
· 스페인	55.4	56.6	56.6	57.0	57.1	1.7	0.5	0.1
일본	50.0	50.0	50.0	55.9	55.9	5.9	5.9	0.0
한국	44.0	38.5	38.5	41.8	41.8	-2.2	3.3	0.0
OECD 평균	45.8	42.2	41.4	43.0	43.3	-2.5	1.0	0.3

자료: OECD Statistics

〈표 5〉 복지국가 유형별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증감률		
							00~17	05~17	10~17
영미형	16.8	14.5	13.6	13.2	14.6	14.6	-2.2	0.1	1.4
호주	-	-	10.0	10.0	10.0	10.0			0.0
캐나다	-	7.0	7.0	5.0	5.0	5.0		-2.0	0.0
아일랜드	23.0	21.0	21.0	21.0	23.0	23.0	0.0	2.0	2.0
뉴질랜드	12.5	12.5	12.5	12.5	15.0	15.0	2.5	2.5	2.5
영국	15.0	17.5	17.5	17.5	20.0	20.0	5.0	2.5	2.5
미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유럽형	21.8	23.8	24.3	24.3	24.8	24.8	2.9	1.0	0.5
덴마크	22.0	25.0	25.0	25.0	25.0	25.0	3.0	0.0	0.0
핀란드	-	22.0	22.0	22.0	24.0	24.0		2.0	2.0
노르웨이	20.0	23.0	25.0	25.0	25.0	25.0	5.0	2.0	0.0
스웨덴	-	7.5	7.6	7.6	8.0	8.0		0.5	0.4
서유럽형	18.0	19.0	19.1	19.7	20.2	20.2	2.2	1.2	0.5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20.0	20.0	0.0	0.0	0.0
벨기에	-	7.0	7.0	5.0	5.0	5.0		-2.0	0.0
프랑스	18.6	20.6	19.6	19.6	20.0	20.0	1.4	-0.6	0.4
독일	14.0	16.0	16.0	19.0	19.0	19.0	5.0	3.0	0.0
네덜란드	18.5	17.5	19.0	19.0	21.0	21.0	2.5	3.5	2.0
남유럽형	16.5	17.8	18.3	18.8	22.3	22.3	5.8	4.5	3.5
그리스	18.0	18.0	18.0	19.0	23.0	23.0	5.0	5.0	4.0
이탈리아	19.0	20.0	20.0	20.0	22.0	22.0	3.0	2.0	2.0
포르투갈	17.0	17.0	19.0	20.0	23.0	23.0	6.0	6.0	3.0
스페인	12.0	16.0	16.0	16.0	21.0	21.0	9.0	5.0	5.0
일본	3.0	5.0	5.0	5.0	8.0	8.0	5.0	3.0	3.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0.0	0.0	0.0
OECD 평균	16.4	18.6	18.4	18.9	19.6	19.5	3.1	0.9	0.6

자료: OECD Statistics

IV. 시사점

□ 복지재정을 선진복지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자원조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인식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은 복지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때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어 고통스러운 복지개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
 -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미식, 북구형, 서구형 복지국가들도 '복지병'으로 명명되는 경제·사회의 위기를 경험하였고, 강력한 복지개혁을 통해 현재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음
- 남유럽형 국가와 일본은 복지지출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합리적인 자원조달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일본과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우리도 복지확대의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법인세수입 비중이 낮고 소비세수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 세제를 통해 형평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운영한다는 반증임¹⁵⁾
- 법인세가 인상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

식이 법인세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소득비례적이라는 사실이 소비세를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세수입 확보에 매우 효율적인 세목으로 꼽힌다는 점도 선진 복지국가에서 소비세를 강화하는 이유임

□ 북유럽 복지국가의 2017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다른 유형의 국가에 비해 가장 낮고, 2010년 이후 4.3%p 인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음

- 복지는 사민주의 복지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시장은 철저하게 경쟁과 효율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북유럽 정부의 정책의지로 해석됨

□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적극 인하하는 이유는 자본유치 - 국내 투자확대 -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구하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영미형 복지국가들도 최근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에 뛰어들고 있음

- 최근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15) 김승래·김우철(2007)은 한 단위 세수를 징수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소비세 15.5%, 노동관련 소득세 21.2%, 자본과세 29.9%로 추정하고 있음

- 서유럽형 국가들은 2000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10.1%p 인하하였으며, 일본은 10.9%p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음
 - 일본도 아베 노믹스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법인세 인하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일 정도로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임

□ 복지지출 압력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 세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음

- 선거때마다 인기영합적인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재재정은 조만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세수구조는 선진국가들과 달리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함

[참고문헌]

-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한국조세연구원 07-13,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성명재,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16
- 이영,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 규모와 구성”,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김성태·박진 편, KDI, 2014
- 조경엽·유진성, 『무상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KERI Insight 12-09,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조경엽·허원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연구 2012-08, 한국경제연구원, 2012
- Caspersen, E. and G. Metcalf, “Is a Value Added Tax Regressive? Annual versus Lifetime Incidence Measures”,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4, 1994
- Castles, F.G.,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Crisis Myths and Crisis Real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Creedy, J., “Are Consumption Taxes Regressive?”,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31, No. 2, 1998
- Esping-Anderso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웹사이트〉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9월 2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